www.krila.re.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RILA Newsletter 7

July 2012 **Vol. 36**

이달의 issue

KRILA 논단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Interview
안병용 의정부시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서초동)
T 02·3488·7300 / F 02·3488·73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CONTENTS

이달의 issue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4 ● 권두언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7 ● KRILA 논단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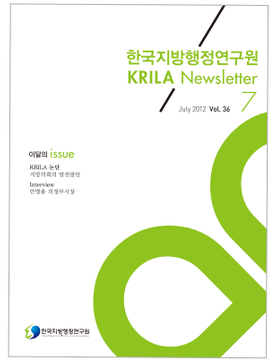
11 ● Interview
안병용 의정부시장

18 ● 해외 우수사례
해외지방의회의 운영체제와 운영사례

21 ● 도시통계
지방의회 의원현황

29 ● 연구원 동정

30 ● 알림마당



7 July 2012 **Vol. 3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Newsletter 통권 제36호
발행인 / 한 표 환
편집인 / 뉴스레터 위원회
연락처 / T 02·3488·7300 / F 02·3488·7309
디자인 / (주)소프트하우스

본 뉴스레터는 매월 말 발간됩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성함, 연락처, 주소,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여 아래 메일주소로 신청하여 주십시오.(무료) **newsletter@krila.re.kr**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Newsletter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krila.re.kr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윤 봉 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필자는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가 짧은 역사와 제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출범으로 이전의 중앙집권의 획일화된 정치제도에서 탈피해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우리사회 전체의 민주성을 증대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방의회가 주민대의기관의 역할 수행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적인 관치행정을 주민중심의 서비스행정으로 변모시키는데 일조하였으며, 집행사업에 대한 질문과 정책 제안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켰다. 또한,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였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전문화, 체계화를 견인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기대치에 100% 부응하는 데는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정당체제 특성으로 인해 지방의회 역시 지역에 따라 편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대의기관이다. 지방의원은 일정한 지역구의 대리인이 아니라 지자체 전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지자체 전체의 공동의 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의원 각자가 각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제도개선과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

이제 지방의회는 지난 20여년의 과정을 거울삼아 행정감시자, 정책결정자, 지역주민의 고충처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 주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제도적인 개선 문제와 의회의 내부 역량강화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지방의회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운영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지만, 단체장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두 기관간의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 있다. 흔히 의회와 집행부를 양대 수레바퀴로 비유하지만 바퀴의 크기가 다르다. 바퀴 크기가 다른 수레바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 맴돌게 될 것이다. 적절한 권한 배분을 통해 상호 균형을 유지해 지방의회가 주민대의기관으로서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첫째, 법령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는 조항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 기관대립형 체제에서 견제 · 감시기관인 의회의 보좌조직인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는 현제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다. 셋째, 단체장의 재의요구권, 선결처분권 등도 축소 내지 폐지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공사와 공단 임원의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도적 측면에 이어 의회의 내부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분권시대의 지방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하는 안건을 심의하여 통과시키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진일보하여 정책제안자, 정책결정자로서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우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보좌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의원에게는 갈수록 복잡하고 세분화 되어가는 지방행정 각 분야의 문제점과 해결대안을 탐색하는 전문적 능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본다. 둘째,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극대화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시민 속으로 한 발짝 더 다가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생업현장, 민원현장, 숙원사업현장을 쉬지 않고 뛰어다녀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홈페이지,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쌍방향 소통에도 중요하다. 셋째,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의 전문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만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의회상을 만들어야 한다. 각종 토론회, 간담회, 연찬회, 연구모임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날로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되어가는 행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의원들의 전문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간 소통 · 연대 활성화 견인

지방의회 출범이 어언 20여년에 접어들었음에도 아직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등 온전한 자치의정 기반 구축이 미흡하다.

필자는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협의회 회원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지방의정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조정해 왔다. 또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정부 또는 대 정치권의 창구 다변화에도 노력해왔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회원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협의회 내에 정책연구기능을 보강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재정확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왔다. 또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 · 예속되어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지방사무화하고, 지방재정권을 확대하는 데에도 힘써왔다.

앞으로 전국시 · 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지방의회의 발전방안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1. 지방의회에 대한 논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를 통해서 부활되었다. 지난 1991년 기초 및 광역의회의 구성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이후 1995년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어 구조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0여년이 경과되는 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에 지방의회의 기여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2011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의 출범 2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긍정적(30.9%)이기보다는 부정적(69.1%)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다수의 연구나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방의원 개개인이 저지르는 부정과 부패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결과이다. 즉,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만큼의 의정활동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나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의회 무용론이 현실화될 수는 없다. 본질적으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당해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인 결정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라면, 자율적인 결정의 기제가 바로 지방의회인 까닭이다. 지방의회가 보유한 권한의 하나가 자치입법권이고, 이는 당해 지역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식과 상관없이 지방의회의 존재와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수준이 지방자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2.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조건

지방의회의 발전은 다양한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척도는 지방의회의 역할수행이다. 지방의회가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은 관련법에 규정된 권한을 근거로 살펴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당해지역의 각종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다. 조례의 제·개정과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그리고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및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의결 등을 통해서 당해지역의 정책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또는 감시이다.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통해서 집행기관이 처리하는 각종 시책들의 타당성과 더불어 위법 및 부당성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지방행정을 견인하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지역주민의 각종 고충처리이다. 지방의회가 보유한 청원의 심사 및 처리권을 통해서 행정과정에서 야기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들이 제대로 수행되면 결과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충족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

〈표 1〉 지방의회의 권한

구 분	내 용
의사결정권	· 조례의 제·개정 · 예산의 심의·확정권 · 결산의 승인권 · 사용료·수수료 및 분담금의 부과·징수권
행정감시권	· 행정사무 감사권 · 행정사무 조사권
청원처리권	· 청원의 심사·처리권 · 청원의 이송과 처리결과 보고요구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하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지방의회의 역할들이 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술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58.1%), 나아가 단체장 견제에서도 적지 않은 응답자(49.4%)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은 지방의회가 지난 20년간 부여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역할수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의 도출과 이의 마련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3.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과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과제는 매우 많다. 기존의 논의들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역량과 각종 의회제도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방법 등 광범위한 현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과제들은 그간의 지방의회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들인 동시에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이기도 하다.

우선, 지방의원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일차적인 과제이다.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수행주체는 지방의원이고, 따라서 지방의원의 역량에 따라서 역할수행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결과이다. 지방의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우수한 인재가 지방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입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전자에 관한 논점은 정당공천제에 둘 필요가 있다. 현행의 관련법령에 따르면, 광역 및 기초의원의 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정당공천제는 정당에 기초한 후보자의 입후보로 후보선택에 긍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지역차원의 보다 유능한 인재의 의회진입에는 장애가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생활정치를 표방하는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정당공천제의 적용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후자인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는 비교적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방의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찬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다선의 경우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으나, 초선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찬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방의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찬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관련기관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더불어서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요청된다. 기존에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대안들로 전문위원제의 개편이나 유급보좌관제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유급보좌관제의 도입이 지방의원의 전문성 보완에 가장 유효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지역주민들의 평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면,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규모 확대 등을 통을 검토할 수도 있다.

다음, 각종 의회제도의 개선은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균형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현행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은 강시장제로 평가되고 있다. 즉, 지방의회와 단체장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수행을 담보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힘의 균형추가 단체장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구조에서 지방의회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로는 권한의 균형화와 사무인력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우선적인 검토사항이다. 권한의 균형화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범위의 확대와 의무이행 확보조치의 강구 등으로 압축되나, 이는 다양한 제약이 수반되어 단기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비하여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구성이후 지방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고,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도 병행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하여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대안을 검토한 바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이 보장되고, 이를 통해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 균형구조에 기여할 있는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효율적인 의회운영 역시 지방의회의 발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이다.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와 지방의정 평가제에 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 정보보유량의 불균형을 말하는데, 이의 해소는 견제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출발점이다. 다시 말하여 견제란 특정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량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그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채널을 통한 정보획득에 지방의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뜻한다. 특히, 제한된 정보의 보유로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는 물론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담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례적인 평가 역시 지방의회의 역할수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기제이다. 의정활동에 대한 외부적 자극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동력을 얻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지방의정 평가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기구에서 전담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지방의회의 발전과제

구 분	내 용
지방의원 역량제고	● 우수인재의 지방의회 진입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재고 ● 지방의원 역량 강화 · 교육 및 연찬 프로그램 제공 · 전문위원제 개선
각종 의회제도 개선	● 지방의회 권한 강화 · 조례제정범위 확대 · 의무이행 확보조치 강구 ●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효율적 의회운영	● 정보확보 · 집행기관 대비 정보 비대칭성 해소 ● 성과관리 · 지방의정 평가제 도입

Interview

공부하는 시장, 연구하는 공무원, 한국 최고의 행정 롤 모델을 꿈꾸는 의정부시



안 병 용
의정부시장

"바쁘신 중에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부시를 경영하시면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신 핵심적인 시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에 취임한 이후,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시책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 롤 모델을 만드는 것 이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조선시대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인 "의정부"와 동일한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명칭에 어울리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행정 내부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대상 청렴도 평가 결과 경기도는 물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영예로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IBA 공직부문 경영혁신 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직윤리제도 운영부문 최우수기관, 지방물가안정 실적 평가 최우수기관, 전국 시니어 비즈플라자 운영 최우수기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시책 평가 우수기관 등 3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정보공개 최우수기관, 제1회 경기도청렴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성과는 그동안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섬김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 대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시장인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공부를 하자는 생각으로 평소에 책을 곁에 두고 틈틈이 읽다 보니 어느새 약 1,000 권이 넘었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짜투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책을 읽도록 노력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책을 많이 읽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바쁜 업무 탓에 어려워하였지만 점차 책 읽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민들이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갔습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했던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시민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곳곳에 북카페, 열린문고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만나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졌습니다. 얼마전 소풍길에도 5개의 열린문고를 설치하여 가벼운 등산 중에도 책을 만나고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현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한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 북 카페와 열린문고 설치사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어디서나 책을 읽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의정부가 변화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해 도서를 대출하여 읽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분위기의 진작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장기적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것이고,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정부시장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나서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시장에 되기 전 행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21년 동안 대학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 온 행정이론들을 현장에서 실천해 보고 싶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침 당과 저를 아끼시는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바람에 의정부 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 2년동안 시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지난 2011년 3월 의정부시는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우리시 공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등을 우리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 학교교육과정운영의 다양화 · 특성화로 교육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특화된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로 지정됨을 의미하며 이를 총칭하는 사업 명칭입니다. 2011년은 10개월이란 짧은 사업기간동안 혁신교육벨트화 사업을 통해 경기도혁신학교 발곡고, 의정부여중에 이어 2012년도 경기도혁신학교로 솔뫼초, 의정부초가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기초학력부진아 등 맞춤형 교육을 통해 2011년도 학업성취도가 (초↑6.7%, 중↑6.4%, 고↑15.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240팀의 초 · 중 · 고등학교 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및 특기적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아리별 관련 전문 아카데미를 시행하며, 10월엔 혁신교육지구 청소년 동아리 페스티발도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은 청소년 문화 창출과 미래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의정부시 혁신교육지구 브랜드사업으로 앞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의정부시 도심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의정부나들목(IC) 이용에 많은 불편과 교통정체를 초래하여 모든 시민이 염원하던 호원IC 공사를 지난 3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서부순환도로의 요금소 예정부지를 활용한 대안을 마련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함은 물론 지속적인 방문 협의로 2011년 12월30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국비 20억원, 도 · 시비 각각 30억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시청뒤 서부순환도로와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호원IC는 총사업비 603억원이 소요되며 2014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5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개통 후에는 의정부–구리방향, 의정부–송추방향의 직접 진출 · 입이 가능한 입체화 IC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시 지 · 정체 및 혼잡 비용을 크게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동부간선도로로 집중되는 교통량의 분산으로 평균 소요시간 24분에서 3~4분으로 20분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민락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택지내 입주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2010년 5월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운영도입을 위한 민락2지구 BRT 개설공사를 2014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간선급행버스가 개통되면 도봉산역과 서울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서울로 출·퇴근 하는시민들은 연결시간이 40여분에서 20분내로 단축되어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제공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 동부간선도로 확장 공사가 추진중이며, 교외선 복선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등 이 모든 사업이 순차적으로 완료될 경우 우리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으로서의 임기 전반부 2년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후반부 2년 동안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에 불이익을 받아 온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시민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시민 모두의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소통을 통한 행정추진이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저는 취임 전부터 “모든 행정과정에 소통을 가장 중요한 기본철학으로 삼고 공부하는 시장으로서 시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여 왔습니다. 취임 이후 현장에서 맞닥트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섬김과 소통에 있음을 요즈음 더욱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는 섬김과 소통을 모든 시정의 근간으로 하여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창의적 사고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책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경기북부 지역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의정부시청의 관련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까울 다름입니다. 현재로서는 7호선연장이 불가능해졌습니다만 앞으로 7호선 연장사업의 유치를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 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교육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정부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사업과 대학유치 등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른 미군반환 공여지의 반환과 개발에 따라 제한이 완화되어 앞으로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실시하고 교육서비스 수준향상 및 평등교육 구현으로 그동안 군사도시의 낡은 이미지를 벗고 진정한 명품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시는 지금껏 과밀억제권역으로『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대학교의 신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에 학교를 이전·증설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산동 일원 캠프 스탠리와 금오동 일원 캠프 에세이욘에 각각 4년제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1월 고산동 일원 캠프 스탠리에 건국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캠프 스탠리가 반환되는 2016년 이후 이루어질 것이며, 사업 착수 전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여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지난 6월초 경기도와 우리시, 국방부 및 을지병원 관계자들과 을지대 의정부캠퍼스 및 을지대학병원 조기 건립을 위한 상생과 소통·협력회의를 열어 조기 건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7월중으로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수준향상과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구상중인 의료서비스와 관광산업을 합친 경기북부지역의 메디컬투어리즘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에는 해결해야 할 수많은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전철 적자해소방안, 도로망 확충, 다문화가정 지원, 고령화사회 대비, 무상급식, 범죄예방, 일자리 창출 등 당장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사안들입니다.



을지대학 부속병원 및 의정부 캠퍼스 조감도

이러한 현안사항들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이를 통한 문제해결의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의 씽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할 행정혁신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는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혁신을 통해 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0년 11월 출범되었으며, 일반행정 · 보건복지 · 교육문화 · 도시교통 등 4개 분과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는 분과위별로 심도 있는 연구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성과물은 반기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4일 제3회 연구발표회가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안 내용에 대해 해당부서와 연구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정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권의 책과 43건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하반기 연구과제 선정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위해 7월 20일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 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정혁신위원회가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조직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949년 수원, 현재의 인천에 이어 1963년에 시로 승격된 도시입니다. 오랜 역사속에서 과거 구 시가지가 노후되어 체계적인 도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타운 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광역적인 재정비 사업을 통한 도시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 도심 2개 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낙후된 가능동, 금오동 지역의 기존 시가지를 쾌적하게 변모시키고자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이 계속되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아파트 미분양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사업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찬 · 반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뉴타운사업 찬 · 반을 둘러싼 갈등은 더 나은 의정부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값진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시에서는 이번 주민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난개발 방지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면서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님께서 지방의회와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견제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와 단체장은 모두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와 단체장 중 어느 한편이 독주하거나 주민의 의사와는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다른 한편의 견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중이 아니라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장단과 항상 만나서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의 간부 공무원들도 의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항상 사전에 의회의 각 소관 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행정혁신위원회에도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대담 · 정리 : 김 필 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지방의회의 운영체제와 운영사례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이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 하에서 운영되는 기관대립형을 획일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반면 자방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이 미약한 강-집행부 약-의회인 것이 현실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부족으로 시의회를 폐지하자는 제안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의사를 결정하고 그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할 때 실현된다. 즉,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성공여부는 지역단위에서 구성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운영체제와 운영사례를 통해 특히 다양한 지방의회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의정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지방의회 운영체제

미국 각 주의 지방정부의 자치권 홈룰(Home Rule)은 지방정부의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홈룰에 의해 부여 받은 자치입법권은 주민투표를 거쳐 선출·구성된 지방의회에 부여되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형태는 지방정부법률(Local laws), 지방정부령(Ordinances), 의회결의안(Resolutions) 등이 있다.

홈룰제도에 의한 시정부의 자치기본조례(Charter)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집행부 조직권 및 정책결정과 정책집행권에 대한 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를 보면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총괄하는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거나 의장이 임명한다. 의회사무기구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사무국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게 하여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에 귀속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풀타임 비서를 1명씩 보좌관으로 두고 있으며 지방정부 내의 법률자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뉴욕시 의회 운영사례

시장-의회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뉴욕시의 시의회는 의장과 51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다. 시장은 시민직선으로 선출되며 행정기관의 총수로 집행기관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의장은 최소 2명 이상의 개인 보좌관 및 사무국을 설치하여 의정활동을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City Clerk)은 시의회가 임명하며 6년 임기를 갖고 시의회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며 동시에 입법전문실, 의회사무국 등을 총괄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한다. 이들 전문 의회직원은 시정부의 예산과 결산, 지방세 제도의 개선, 예산변경, 지방채 발행 및 시장의 경영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지방의회 각 위원회와 의원들을 보좌하여 지방정부 조례 제정, 집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지원활동도 수행한다.

피닉스시 의회 운영사례

시-전문경영인(City Manager)형을 채택하고 있는 피닉스(Phoenix)의 시의회는 8명의 의원이 8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분리된 선거제도로 선출된 시장이 당연직 의장을 겸함으로써 시의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회가 임명하는 집행기관의 총책임자인 시전문경영인(City Manager)은 행정기관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집행부 공무원의 임명, 인사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시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이 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의회-시전문경영인 체제에 의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분리된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의회-시장형 기관구성에서 독립적인 조직과 인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전문경영인이 집행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듯이 의회 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의장이 직접 갖거나 보통은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해외사례에서 본 시사점

첫째, 미국의 지방정부 형태는 다양하지만 의회중심의 집행기관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회-시장형태의 기관분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취하는 형태로 의회와 시장 중심의 집행부간 조직운영의 독자성, 각 기관의 인사권 독립 등이 확보되어 있다. 의회-시전문경영인 형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인사권이나 조직 운영권은 시장이 아닌 시전문경영인이 갖게 되지만 시장은 이러한 권한이 부여되는 시전문경영인을 의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의장으로서 참여하여 영향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는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지방정부가 의회중심의 집행기관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 지방의회에 대한 확실한 지원체제를 들 수 있다. 의회-시장 형태의 의회 의장은 최소 2명 이상의 개인 보좌관과 사무국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전문 의회직원으로부터 지방의회 각 위원회와 의원들을 지방정부 조례 제정, 집행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받고 있다. 의회-전문경영인 형태의 시정부의 경우도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권한 관계에서는 역시 지방의회가 모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의회우월주의에 기초한 기관형태로 의회 내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일반적으로 의회사무국장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며 이들의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 세 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초빙연구원)

지방의회 의원현황

-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주로 주목받는 대상은 단체장이었음
-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의회의 활발한 활동과 역할에서 그 꽃을 피울 수 있음
- 기존에 독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의회보다는 단체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임
- 따라서 이번 자치단체 동향은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2010년 6.2지방선거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본란에 게재한 모든 정보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자료를 인용한 것임

● 정당별 당선자 현황

- 전반적으로 당시 한나라당이 1,087석을 민주당이 871석을 차지하여 다른 정당 및 무소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당선자를 배출하였음
- 특히, 광주, 전북, 전남, 울산, 대구, 경북, 경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당선자가 두드러지게 대비되고 있음

〈표 1〉 시군구 의회 의원 정당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 인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중심연합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무소속
합계	2,512	1,087	871	95	90	1	22	2	17	10	12	305
서울	366	183	173	0	3	0	4	0	2	0	0	1
부산	158	93	28	0	9	0	3	0	2	1	2	20
대구	102	70	4	0	2	0	2	0	1	3	5	15
인천	97	46	43	0	4	0	2	0	0	0	0	2
광주	59	0	44	0	10	0	0	0	2	0	0	3
대전	55	11	21	23	0	0	0	0	0	0	0	0
울산	43	25	0	0	13	0	2	0	1	0	0	2
경기	363	177	165	0	8	1	2	0	2	1	0	7
강원	146	90	36	0	0	0	0	0	0	0	0	20
충북	114	44	45	12	2	0	0	0	0	0	0	11
충남	152	50	34	60	0	0	0	2	0	0	0	6
전북	173	0	119	0	3	0	1	0	4	0	0	46
전남	211	0	146	0	14	0	0	0	2	0	0	49
경북	247	162	1	0	2	0	2	0	1	2	5	72
경남	226	136	12	0	20	0	4	0	0	3	0	51

– 시도의회 당선자 현황도 영남과 호남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한 대비를 보이고 있음
– 시군구 의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우위를 차지한 반면에 시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했음

〈표 2〉 시도의회 의원 정당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 인수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건국당	국민참여당	미래연합	친박연합	무소속
합계	680	252	328	38	18	3	0	3	1	1	36
서울	96	22	74	0	0	0	0	0	0	0	0
부산	42	37	0	0	0	0	0	0	0	0	5
대구	26	25	0	0	0	0	0	0	0	0	1
인천	30	5	21	0	1	0	0	1	0	0	2
광주	19	0	18	0	1	0	0	0	0	0	0
대전	19	0	4	15	0	0	0	0	0	0	0
울산	19	11	0	0	6	0	0	0	0	0	2
경기	112	36	71	0	1	1	0	1	0	0	2
강원	38	20	12	0	0	0	0	0	0	0	6
충북	28	3	20	4	1	0	0	0	0	0	0
충남	36	5	12	19	0	0	0	0	0	0	0
전북	34	0	33	0	1	0	0	0	0	0	0
전남	51	0	45	0	2	0	0	0	0	0	4
경북	52	44	0	0	0	0	0	0	1	1	6
경남	49	35	2	0	4	2	0	1	0	0	5
제주	29	9	16	0	1	0	0	0	0	0	3

● 직업별 당선자 현황

– 당선자중 압도적인 비율은 기존 지방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었으며 상업, 건설업, 회사원, 교육자, 무직자 등에서 많은 당선자들이 배출되었음
– 그러나 직업을 기타로 응답한 당선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8개 도에서는 농축산업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시군구 의회 의원 직업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 인수	지방 의원	정치인	농축 산업	상업	광공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 의사	회사원	교육자	정보 통신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2,512	735	468	227	162	8	10	16	83	4	14	10	72	25	8	2	5	32	631
서울	366	98	90	0	9	0	0	0	15	1	2	1	9	6	2	0	0	0	133
부산	158	33	26	1	19	3	3	0	5	0	1	3	2	0	2	0	0	2	58
대구	102	25	19	2	11	2	1	0	4	0	3	0	1	1	1	0	0	0	32
인천	97	22	20	4	3	0	0	0	1	0	1	0	3	0	1	0	0	1	41
광주	59	17	13	1	0	0	0	0	0	0	0	0	3	1	0	0	0	0	24
대전	55	11	13	0	5	0	0	0	1	0	0	0	2	0	0	0	0	0	23
울산	43	9	10	0	2	1	0	1	2	0	0	0	6	0	0	0	0	0	12
경기	363	110	102	19	24	0	0	0	7	0	1	3	11	6	0	1	0	1	78
강원	146	53	21	13	16	0	2	1	3	0	1	0	4	1	0	0	0	7	24
충북	114	27	25	20	12	0	0	0	4	0	1	0	4	0	0	1	0	1	19
충남	152	46	23	33	12	0	1	1	8	0	0	1	5	2	0	0	0	2	18
전북	173	65	23	29	4	0	1	2	3	2	0	0	3	4	0	0	4	4	29
전남	211	67	25	32	10	0	0	6	6	1	2	2	4	1	1	0	0	1	53
경북	247	96	22	38	24	1	0	0	12	0	0	0	8	1	0	0	0	7	38
경남	226	56	36	35	11	1	2	5	12	0	2	0	7	2	1	0	1	6	49

–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들도 기존 지방의원이나 정치인들의 당선이 높았으며 기타로 답한 당선자의 비율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시군구의회 의원 당선자 자료와 비슷하게 8개 도에서 농축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4〉 시도의회 의원 직업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인수	지방의원	정치인	농축산업	상업	운수업	수산업	건설업	언론인	금융업	약사의사	회사원	교육자	정보통신	출판업	공무원	무직	기타
합계	680	141	205	32	29	3	4	22	1	4	6	18	16	1	5	4	14	175
서울	96	9	31	0	1	0	0	5	1	1	1	0	3	1	0	3	0	40
부산	42	18	10	0	4	2	0	2	0	0	1	0	1	0	1	0	0	3
대구	26	7	3	0	2	0	0	2	0	1	0	0	3	0	1	0	1	6
인천	30	3	8	0	0	0	0	0	0	0	1	0	2	0	0	0	1	15
광주	19	3	7	0	0	0	0	0	0	0	1	0	0	0	0	0	0	8
대전	19	2	5	0	2	0	0	0	0	0	0	2	0	0	1	0	0	7
울산	19	4	4	0	2	0	0	1	0	0	0	1	0	0	0	0	1	6
경기	112	16	46	4	3	1	1	2	0	0	0	4	3	0	0	1	1	30
강원	38	12	9	2	2	0	0	3	0	0	0	3	1	0	0	0	2	4
충북	28	2	9	6	2	0	0	2	0	0	0	1	0	0	0	0	0	6
충남	36	6	14	4	2	0	0	2	0	0	0	0	0	0	1	0	1	6
전북	34	12	11	2	2	0	0	1	0	0	0	2	0	0	0	0	0	4
전남	51	5	17	5	2	0	2	1	0	0	0	2	1	0	1	0	0	15
경북	52	14	16	3	1	0	0	0	0	1	2	0	2	0	0	0	3	10
경남	49	14	12	3	3	0	1	0	0	1	0	2	0	0	0	0	3	10
제주	29	14	3	3	1	0	0	1	0	0	0	1	0	0	0	0	1	5

● 학력별 당선자 현황

– 시군구 의회 의원 당선자들의 학력은 대부분이 고졸이상이며 특히 대졸자의 비중이 제일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시에는 초 · 중졸업자들이 거의 없는 반면에 8개 도에서는 초 · 중졸업자의 비중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5〉 시군구 의회 의원 학력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인수	미기재	무학	초퇴	초졸	중퇴	중졸	고퇴	고졸	전문대재	전문대퇴	전문대졸	대재	대퇴	대학교수료	대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대학원수료	대학원졸
합계	2,512	87	2	1	41	9	78	32	368	51	16	349	185	62	5	703	141	6	64	312
서울	366	34	0	0	0	1	5	1	28	8	1	31	49	10	1	101	33	0	7	56
부산	158	10	0	0	0	0	3	4	17	2	0	28	11	5	0	38	13	0	8	19
대구	102	1	0	0	0	0	5	0	11	6	1	16	8	1	0	22	8	0	6	17
인천	97	11	0	0	1	1	1	0	23	2	1	11	13	4	0	21	4	0	1	3
광주	59	1	1	0	0	0	0	1	5	0	0	5	6	3	0	20	3	0	1	13
대전	55	4	0	0	0	0	0	0	7	1	0	9	6	1	0	18	3	0	1	5
울산	43	0	0	0	0	0	0	2	6	0	0	11	2	0	0	15	2	0	1	4
경기	363	6	0	0	1	1	5	2	39	13	1	36	34	10	0	105	32	2	11	65
강원	146	1	0	0	4	2	8	1	29	1	0	25	3	3	0	40	5	0	2	22
충북	114	0	0	1	2	0	6	4	26	1	1	18	4	5	0	30	6	0	3	7
충남	152	3	0	0	11	0	13	3	31	3	0	24	2	3	0	31	7	1	3	17
전북	173	5	0	0	4	1	7	1	24	4	2	21	7	4	2	64	7	1	3	16
전남	211	5	1	0	7	1	10	4	28	3	2	48	13	6	1	61	1	0	3	17
경북	247	4	0	0	4	1	9	6	44	4	3	43	11	5	0	81	8	0	5	19
경남	226	2	0	0	7	1	6	3	50	3	4	23	16	2	1	56	9	2	9	32

–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도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대와 고졸자 및 이하의 학력을 가진 당선자의 비율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6〉 시 · 도의회 의원 학력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인수	미기재	초졸	중졸	고퇴	고졸	전문대재	전문대퇴	전문대졸	대재	대퇴	대학교수료	대졸	대학원재	대학원퇴	대학원수료	대학원졸
합계	680	7	3	7	2	55	4	1	50	30	12	1	210	59	4	36	199
서울	96	3	0	0	0	1	1	0	4	7	4	0	20	10	2	4	40
부산	42	0	0	1	0	2	0	0	1	0	0	0	8	6	0	6	18
대구	26	0	0	1	0	0	0	0	0	0	1	0	5	2	0	3	14
인천	30	1	0	0	1	3	0	0	1	1	1	0	13	3	0	1	5
광주	19	0	0	0	0	0	0	0	0	1	0	0	5	2	0	2	9
대전	19	0	0	0	0	1	0	0	5	0	0	0	5	1	0	1	6
울산	19	0	0	1	0	4	0	0	4	0	0	0	7	1	0	0	2
경기	112	0	0	0	0	7	1	0	9	8	1	0	33	14	2	4	33
강원	38	0	2	1	0	4	0	0	1	3	1	1	13	3	0	3	6
충북	28	0	0	0	1	8	1	0	1	3	0	0	9	1	0	0	4
충남	36	2	0	1	0	6	0	1	3	1	0	0	11	2	0	0	9
전북	34	0	1	0	0	3	0	0	1	2	1	0	14	1	0	5	6
전남	51	0	0	1	0	3	1	0	7	1	3	0	19	1	0	1	14
경북	52	1	0	0	0	4	0	0	6	1	0	0	19	2	0	1	18
경남	49	0	0	0	0	6	0	0	2	2	0	0	18	8	0	4	9
제주	29	0	0	1	0	3	0	0	5	0	0	0	11	2	0	1	6

● 성별 · 연령별 당선자 현황

– 시군구 의회 의원 당선자들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대 별로 보면, 50대의 비중이 제일 많고 40대, 60대가 각각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7〉

〈표 7〉 시군구 의회 의원 성별 · 연령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인수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0대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대미만
합계	2,512	2,238	274	8	128	881	1,140	349	6
서울	366	298	68	3	21	106	172	62	2
부산	158	139	19	0	18	48	70	22	0
대구	102	90	12	1	7	28	50	16	0
인천	97	82	15	0	4	39	38	16	0
광주	59	47	12	0	9	28	18	4	0
대전	55	46	9	1	5	25	17	7	0
울산	43	38	5	0	2	27	13	1	0
경기	363	299	64	2	29	168	146	18	0
강원	146	136	10	0	2	52	74	18	0
충북	114	104	10	0	4	33	55	22	0
충남	152	146	6	0	4	48	69	29	2
전북	173	163	10	0	9	59	72	33	0
전남	211	201	10	0	6	60	105	38	2
경북	247	237	10	1	2	77	131	36	0
경남	226	212	14	0	6	83	110	27	0

– 시도의회 의원 역시 남성 당선자의 비율이 여성 당선자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 당선자를 보면 40대 당선자들이 50대 당선자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어서 시도의회 의원 당선자의 연령이 시군구 의회 의원 당선자 연령 보다 더 젊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표 8〉

〈표 8〉 시도의회 의원 성별 · 연령별 당선자 현황

시 도	당선 인수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9대미만	40~49세	50~59세	60대이상
합계	680	625	55	31	282	282	85
서울	96	83	13	9	43	38	6
부산	42	40	2	1	17	15	9
대구	26	21	5	1	9	13	3
인천	30	28	2	2	16	11	1
광주	19	17	2	2	13	3	1
대전	19	18	1	0	7	9	3
울산	19	15	4	0	12	5	2
경기	112	100	12	10	41	52	9
강원	38	35	3	1	16	16	5
충북	28	27	1	1	10	10	7
충남	36	35	1	0	12	15	9
전북	34	33	1	0	18	9	7
전남	51	50	1	0	23	22	6
경북	52	48	4	0	14	29	9
경남	49	46	3	3	16	26	4
제주	29	29	0	1	15	9	4

하 현 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제4차 KRILA 자치포럼개최



주 제 / Collaborative Management Networks: What's a Manager to Do?
일 시 / 2012. 6. 19(화) 16:0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5층 세미나실

2012년 2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공동연구회 개최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 · 재정 관리
일 시 / 2012. 7. 26(목) 14:30
장 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2012년 행정학 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주 제 / 국가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략
일 시 / 2012. 6. 27(수) ~ 6. 29(금) 9:30
장 소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주 최 / (사) 한국행정학회
후 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기간행물 발간

● KRILA FOCUS (6월호)

– 통합재난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중앙 · 지방간 업무 재설계



KRILA 교육연수

02 · 3488 · 7353

● 제4기 지방성인지예산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7. 4 ~ 7. 6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 제5기 지방성인지예산 교육

교육장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의실
교육일시 / 2012. 7. 11 ~ 7. 13
해당기관 / 전국 지방자치단체

알림마당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Newsletter **알림마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되는 책자 및 소식지를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홍보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T 02·3488·7361 / yjtak@krila.re.kr 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